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일본 학계의 인식과 역사교과서의 서술 분석*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Japanese Academia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장 세 윤**
Se-Yun Chang

국문요약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가정부[假政府]’ 등)로 간주하며 시종일관 탄압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와 일부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서술, 평가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부정확하고, 부정적 서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시정부에 대한 근래의 연구 성과는 삿사 미츠아키(佐佐充昭)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일본 역사(일본사,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는 싯교출판사(實敎出版社)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해 소략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일본 학계의 인식 개선과 연구

<http://doi.org/10.56475/ygsr.2024.29.1.157>

논문투고일 : 2024.05.13. 논문심사일 : 2024.05.22. 게재확정일 : 2024.06.07.

* 이 논문은 2020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동아시아역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E-mail: seiyoon06@naver.com)
Chief Researcher, Sungkyunkwan University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진작(振作), 교과서 서술 반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단기적,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계·교육계(특히 일본학계)와 교류 강화·활성화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출판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 학계의 임시정부 연구 강화와 성과의 국제화, 대중화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일본 학술서나 개설서, 교양서, 역사교과서 등에 임시정부 활약상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한국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 임시정부(한국광복군)의 실상과 업적, 성과, 한계 등에 대한 자유로우며 진솔한 연구, 담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다각적 콘텐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서술하는 시각과 자세에서 특정 정치이념이나 목적사관(目的史觀)에 좌우되는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남한)과 북한 중국 연변, 중국·일본학계, 구미(歐美)학계 등의 이데올로기적(이념에 따른 편향적) 시각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일본 학계, 대한민국임시정부, 고교 역사교과서, 역사인식, 조선총독부

목 차

I. 머리말	IV.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대한민국임시정부
II.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방침	V. 맺음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구 振作, 교과서 서술 반영 방안
III. 일본학계의 대한민국임시정 부에 대한 인식	

I. 머리말

2024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국가보훈부)는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회나 기념사업회 등에서 많은 행사와 학술회의, 여러 기념사업과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러한 행사와 학술회의 등이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되고,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왔는지는 차분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혹은 '임정'으로 약칭)의 중국에 대한 외교 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었다.¹⁾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한국연구 전문가들에 의해 임시정부 관련 연구서와 단행본, 자료집 등이 간행되어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한 바 있다.²⁾ 그러나 필자의

-
- 1)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의 對中外交 등 관련분야에 대한 근래의 주요 연구 현황은 다음을 참조. 장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장세운, 「중국지역 韓人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申延澈교수 정년기념 사학문총』, 일월서각, 1995; 정용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외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國史論』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연구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 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한시준,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6;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999; 김정현, 「중국 國民政府의 한국독립 지원과 邵毓麟의 활동-邵毓麟의 『使韓回憶錄』과 『勝利前後』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77,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배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중국 - 동아시아에서의 반제 연대와 민주공화국의 본격적 출발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집, 2019; 장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 일부 프랑스 문서를 통해 본 한불관계의 한 단면」, 『한국근현대사연구』 88집, 2019 참조.
- 2) 대표적으로 沈壽·孫科志,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2; 沈壽·孫科志(조일문 역), 『피어린 2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楊昭全, 『大韓民國臨時政府史』,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997; 楊昭全·韓忠富, 『大韓民國臨時政府史料彙編』, 吉林省社會科學院, 1997; 馮開文·楊昭全 主編, 『大韓民國臨時政府在重慶』, 重慶出版社, 1999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자료집과 독립운동사 단행본으로 楊昭全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上·下,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87; 楊昭全, 『中國境內韓國反日獨立運動史』1·2卷,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최근 중국학자들의 임정 관련 주요 성과로 다음을 참조. 石建国, 「背靠中国: 大韩民国临时政府迁徙江浙时期外交活动述论」, 『当代韩国』第2期, 2019; 石建国, 「论李东辉与大韩民国临时政府初期的外交活动——纪念大韩民国临时政府成立100周年」, 『延边大学学报』第2期, 2019; 孙科志, 「中国共产党与韩国独立运动——以文献为中心」, 『东疆学刊』

寡聞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권의 전문적 단행본이나 자료집도 나온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방침을 간단히 검토하고, 임시정부가 일본 학계와 교육계에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 학계 일각의 연구 성과나 일부 사전,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검토 대상을 한정하여 고찰코자 한다.

Ⅱ.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방침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는 1919년 3월부터 약 2~3개월간 치열하게 전개된 3·1운동의 성과로 중국 상해(上海)에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결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정부의 실체를 부인하며 일제강점기 내내 이 임시정부를 탄압하면서 와해공작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第1期, 2018; 孙科志·刘牧琳, 「上海时期的大韩民国临时政府与中国」, 『历史教学问题』第6期, 2019; 王静, 「大韩民国临时政府在中国的迁移历程初探」, 『卷宗』2016年 第5期; 朱芹, 「独立运动时期李承晚对华认知与对华外交探析」, 『当代韩国』第4期, 2016; 朱芹, 「李承晚与初期临时政府的矛盾与纠葛」, 『聊城大学学报』第1期, 2016; 朱芹, 「中韩合作抗战中临时政府承认问题探析」, 『当代韩国』第4期, 2017; 朱芹, 「李承晚与大韩民国临时政府的关系沉浮」, 『当代韩国』第3期, 2019; 周金翠·王雪珂, 「镇江“大韩民国临时政府”调研启示录」, 『文教资料』第9期, 2018; 崔凤春, 「大韩民国临时政府沪杭活动旧址考述——兼述韩国独立党杭州活动旧址」, 『当代韩国』第2期, 2019; 夏云, 「论韩国独立运动家赵素昂为韩国临时政府做出的贡献——以重庆时期和归国后为中心」, 『新西部(理论版)』第18期, 2016; 金智荣, 「寻找民族独立的外援——金九与中国国民政府」, 中国人民大学博士学位论文, 2016.

때문에 이들 관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호칭은 ‘참칭(僭稱) 가정부(假政府)’ 또는 상해 가정부(上海假政府), 가정부, 재지불령단(在支不逞團) 등이었다.³⁾ 현재 일제 당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정책 등의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유리와 한지현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⁴⁾

임시정부 성립 직후 조선총독부 수뇌부는 “인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은 의원으로 국회를 만들고 토지·인민을 갖지 못한 가정부(假政府)를 조직하는 것과 같은 것은 차라리 골계(滑稽)라고 할 밖에 도저히 큰 일을 야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⁵⁾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며 다각적 탄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922년 6월부터 1924년 9월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지낸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는 1919년 4월 성립부터 1920년 5월까지의 임시정부 활동을 5단계로 구분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임정의

-
- 3)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에서 발행한 내부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1938(東京 巖南堂書店 1966년 復刻 발행). 1933년판: ‘소위 참칭(僭稱) 임시정부’라고 표기(243~246쪽). 1938년판: 임시정부 또는 ‘재지불령단(在支不逞團)’이라고 표기(266~270쪽). ②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京城 1934). 김구·김봉준 등의 항목에서 ‘상해 가정부로 표기(93·95쪽). ③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 要史』, 1934(이 책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 요사』, 선인, 2009 참조). ‘上海 假政府’라는 명칭으로 관련 동향을 상세히 서술(85~96쪽). ④ 朝鮮總督府 警務局,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名古屋: 風媒社, 1979). ‘상해 가정부로 표기(223~224쪽). 이밖에 朝鮮總督府 編(박찬승 외 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중·하, 민속원, 2018 등 참조.
- 4) 최유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일제의 정책 - 상해시기(1919~1932)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한지현,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3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 5) 『在上海鮮人の行動』, 『上海時事報』126號(1919.8.15), 『齋藤實文書』; 최유리, 위 논문, 300쪽에서 재인용.

활동을 “군자금 모집시대, 강도시대, 불온문서시대, 암살시대, 폭탄투척 시대”라는 황당한 용어로 분류하며⁶⁾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루야마의 이러한 임시정부 인식에 대해 사이토총독 측근 중의 한사람이었던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조차 이를 “실로 민심 불안정의 확증”이라고 비판하기조차 했다.⁷⁾

1. 기존연구와 자료를 통해 본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임시정부 인식

최유리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 당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임시정부 요인 사이에 내분을 조장하여 이들을 회유하고 이간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⁸⁾ 특히 조선총독부 등은 임시정부에 대해 직접 폐쇄조치를 강구하는 강압탄압책을 강구하는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을 이간시켜 약화시키는 책동을 벌였다고 한다. 전자는 국내와 연계되는 연통제(聯通制) 조직을 파괴하는 한편, 1919년 10월 상해 프랑스 조계(租界)를 관할하는 프랑스 조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단속과 퇴거 명령, 청사의 폐쇄조치 등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사례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이후 다시 강행되었다. 강압책 외에 회유와 이간 책동은 일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방침이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李光洙)·김희선(金羲善)·

6) 한지현, 앞의 논문, 174쪽.

7) 마쓰다 도시히코,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257쪽.

8) 최유리, 위의 논문, 300쪽.

9) 상세한 내용과 자료는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上海假政府1』, 102號(1919.10.25) · 16596(1919.10.23) · 286號(1919.11.8) 보고문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등 참조.

이영렬(李英烈) 등이 일제에 회유되어 귀국하는 등의 소동을 벌인 사례를 들 수 있다.¹⁰⁾ 특히 다수의 한국인 밀정을 동원한 이간책동은 잘 알려져 있다.

1919년 11월 여운형의 일본 방문 사례는 사실 일제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간책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여운형 자신은 종교단체의 초청을 받은 개인적 방문이라고 강조했다지만, 이 사건을 전후하여 상해 임시정부 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표출되어¹¹⁾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진영에 손상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시정방침으로 '문화정치'를 요란하게 내세웠지만, 사실 그 내용은 매우 기만적이었다. 실제로 그는 부임 직후 '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의 해산'과 '재외배일선인(在外排日鮮人)의 회유'를 '제일(第一)의 급무(急務)'라고 인식하고 있었다.¹²⁾ 그의 재임 이후 경찰서는 1919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경부(警部) 이하 경찰관 수도 약 14,000명에서 20,13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조선총독부는 후일 『施政25年史』를 발간했는데, 1920년대 초 '문화정치'의 실상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방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0) 최유리, 위의 논문, 307~310쪽. 김희선·李喜佩 등을 동원한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의 공작 상황은 그의 일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상세한 내용은 宇都宮太郎資料研究會 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3, 東京: 岩波書店, 2007 참조).

11) 위의 논문, 310~311쪽. 여운형과 관련 인물에 대한 전향·이간 공작 역시 위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3에 잘 나타나 있다(34~35쪽 및 1919년 11월 22일자 내용[334~335쪽] 참조).

12) 宇都宮太郎資料研究會 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3, 313쪽.

“특히 본기(本期) 당초에 우선 본부 관제를 고치고, 종래 총독의 임용은 무관에 한정했으므로 새롭게 하여 그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또 재래의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도로 하고, 관리교원 등의 제복 대검(帶劍)을 폐지(大正 8年--1919년[필자]-칙령 제403호)하고 이로써 총독정치의 기본을 순전한 문치주의를 이루는 방침을 명백하게 하고, **대체로 문화적 개발에 힘을 다하기 위해 보통 문화정치라고 부르지만, 반도(半島) 정치의 근본 방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달리하는 곳은 없는 것이다**(밑줄 및 굵은 글자는 필자, 이하 同-) 곧 병합 때에 조서의 취지를 받들어 더욱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큰 뜻을 확충하고 반도로 하여금 제국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략) 이렇게 하여 일시동인의 성의(聖意)에 의거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시하고 선량한 민중을 애호함과 동시에 **만일에 국헌(國憲)에 반항하여 병합 정신에 반하는 것과 같은 불명배(不逞輩)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이를 처벌하는 방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¹³⁾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위 ‘문화정치’라고 하지만 그 근본방침, 곧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본질은 ‘추호도 달리하는 바가 없었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탄압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아갔던 것이다. 임시정부에 대한 방침 역시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이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소위 ‘문화정치’의 허구성은 이미 일본학계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¹⁴⁾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경무국 당국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강우규(姜宇奎)의 사이토 총독 폭탄투척 사건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聯通制) 등을 통한 국내 진입활동 등을 인상적인 저항운동으로

13)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314쪽; 서종진,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의 식민지 분할통치 - 잠정권 부여 및 자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전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9.4.9), 동북아역사재단, 252~255쪽에서 재인용.

14) 糟谷憲一, 「朝鮮總督府の文化政治」, 『近代日本と植民地』2(帝國統治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1992; 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治』, 岩波書店, 2002 등 참조.

기억하고 있었다.¹⁵⁾ 소위 '문화정치' 초기의 경찰간부진이 가장 경계했던 사건들은 거의 예외없이 재외 한인이나, 구미열강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 경찰에게 '위협'은 항상 '조선 국외'에서 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향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가 “上海의 大韓共和國 假政府와 조선내 연합하는 반대운동을 잇는 애국기금 및 군자금 모집원의 검거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¹⁶⁾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관계 당국과 간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을 일부 자료를 통해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한(大韓)임시정부라는 것이 조직되자마자 조선 내 각지의 무뢰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들어 지방에서 결합해 무단(武斷)을 주장하는 자, 문치를 주장하는 자, 또는 미국에게 조선의 통치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곧바로 수많은 결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래 항상 정부 내부의 내분과 당쟁이 끊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논쟁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제국(帝國)의 명에서 벗어나 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 쟁의하고 있는 것이며, 모두 독립이라는 목적을 향해 매진하고자 하는 뜻을 마음 속으로 맹세하는 듯하다.”¹⁷⁾

“상해(上海)에 임시가정부(臨時假政府)라는 것이 설치되어, 드디어 독립 정부가 경성에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각종 음모가 조선 내 곳곳에서 펼쳐져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었으므로…….”¹⁸⁾

-
- 15) 마쓰다 토시히코(松田利彦), 『1920년대 초 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기념 동아시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4. 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주최, 192쪽.
- 16) 丸山鶴吉, 『朝鮮の治安』, 『朝鮮』100號, 1923; 鈴木敬夫, 『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高大人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9, 198쪽에서 재인용.
- 17) 조선총독부 警務局, 『上海在住不逞鮮人ノ近況』(1921년 10월); 마쓰다 토시히코,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251~252쪽에서 재인용.
- 18) 丸山鶴吉, 『朝鮮統治の目標を定めよ』, 『外交時報』 644號, 1931.12, 274쪽; 마쓰다 토시히코, 위의 논문, 255쪽에서 재인용.

“원래 재외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독립운동은 오늘날에는 단순히 상해 가정부(假政府)의 성쇠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종래부터 독립운동에 가장 관계가 깊은 가정부가 당장 쇠멸(衰滅)할 것 같다는 사정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면…….**”¹⁹⁾

“독립소요(3·1운동)는 조선인들의 사대사상이 미국(米國)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이 최대의 원인이었으며, 상해 가정부(假政府)가 쓸데없이 미국의 후원이 있다면서 민심을 현혹시켰다고는 하지만, 월슨이 실각(失脚)해 국제연맹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미국이 반드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조선인들의 사상은 일변(一變)하여 가정부의 성망(聲望)은 완전히 실추해 버렸다.**”²⁰⁾

일본학자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의 연구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성립부터 1920년경까지는 일제 당국의 ‘조선 국외’ 항일운동에 대한 위기감이 국내 운동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위기감도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21년 초·중반부터 임시정부가 내분이나 국내와의 연락망이 차단되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임정의 외교활동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일제 당국이 1920·21년에 3·1운동 1·2주년 계기 시위운동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어 임시정부에 대한 경계의식도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²¹⁾

한편 일본 정부, 주로 일본 외무성 역시 임시정부를 한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거의 ‘上海假政府’로 호칭하며

19)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の治安狀況』1923년판, 마쓰다 도시히코, 위의 논문, 258쪽에서 재인용.

20) 조선총독부 경무국, 『不逞運動ノ真相』, 마쓰다 도시히코, 위의 논문, 264쪽에서 재인용.

21) 마쓰다 도시히코, 위의 논문, 267~268쪽.

상해 총영사관 등을 통해 다양한 탄압정책과 방침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활동 관련 자료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공개한 일본 외무성 문서기록에 비교적 상세히 파악되고 있다.²²⁾ 일본 외무성 산하의 각국 주재 대사관이나 공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중국 상해나 유럽(파리 등), 미국(워싱턴 등) 등지에서 활동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정을 낱낱이 파악·보고했으며, 특히 임정 성립 전후시기에 김규식 등의 파리평화(강화)회의 파견과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탄압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주재 대사관을 통해 1919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김규식 등의 입국과 평화회의 장소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대응공작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동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일본 정부에 수시로 보고하며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던 것이다.

1919년 5월 14일 김규식 등 임정 대표단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파리평화회의 클레망소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²³⁾ 일본 정부는 이를 '한국인의 망동'으로 평가하고, 각종 언론에 이를 비난하는 자료를 보내 비판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일본 최대 발행부수를 발간하고 있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1919년 5월 18일자에 『국제 워싱턴발』이라는 보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파리 조선인 망동'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⁴⁾

22)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국외 항일운동 일본외무성기록의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上海假政府1-6』 및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美1-8』 참조.

23) 『한국대표단이 평화회의에 서한 전달』,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3권(대유럽 외교), 국사편찬위원회, 2008 참조.

24) 『파리 조선인 망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1권(일본·미국 보도기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참조.

2. 일제 당국과 상해 일본 총영사관의 대응

일본 외무성 영사관원들은 재외한인들에 대해 '영사재판관'을 내세워 한인문제(韓人問題)에 간섭하고 중국 침략의 빌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⁵⁾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소련)에서 활동하는 한인 지도자들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측의 탄압을 피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임시정부 등 민족운동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세력에게 참정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독부 당국의 의도는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의 다음 언설(言說)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현재 사상의 큰 흐름은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자신들의 문화를 축진하여 교육을 충분히 하고 실력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조국을 회복한다는 열망에 지배당하는 것 보다는 보다 더 높고 이상적인 사상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조선인들이 갖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⁶⁾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 참정권 운동이 한 때 조명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식민지 관료들은 식민지 출신의원의 일본 '제국의회' 진출로 인한 일본 내 정치의 혼란, 식민지민의 '민도(民度)'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였다. 결국 참정권(자치)운동은 1924년에 중지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25) 이에 대해서는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 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東京: 校倉書房, 2005 참조.

26) 丸山鶴吉, 『在鮮四年有余半』, 松山房, 1924, 29-34쪽.; 서종진,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의 식민지 분할통치 - 참정권 부여 및 자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전개』, 255쪽에서 재인용.

통치를 긍정하는 부일(附日)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독립운동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위 '무단정치'를 비판하며,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주장한 일본 본토의 관료들도 그 본심이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여간 이러한 인식과 논리, 술책이 임시정부에 대한 다양한 압박으로 가해졌던 것이다.

임시정부와 상해 일본총영사관 등의 대응과 탄압에 대해서는 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 1953년생, 小樽商大 교수)의 일련의 연구를 집대성한 『外務省警察史 - 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東京: 校倉書房, 2005)가 주목된다. 이 책은 출판사의 '歴史科學叢書' 시리즈물의 하나인데, 9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조선·한국·중국(關內·滿洲·間島 등)에서 활동한 일본 영사관 및 외무성 경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계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책이 아닌가 한다.

오기노는 이 책 제2부 3장 2절 「1920년대의 在中國關內 외무성 경찰」의 '조선독립운동의 取締彈壓(615~625쪽)', '上海特高警察機關의 창설과 확충(625~636쪽)', 그리고 3장 3절 「'滿洲事變'期の 在中國關內 외무성 경찰」의 '上海警察部 제2과의 창설(692~707쪽)' 소항목에서 일본 上海總領事館측의 임시정부 등 관내 한인 민족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과 밀정 파견 등 여러 공작의 실상,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김구 체포 관련 동향 등을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서술하였다. 추후 한국학계에서 일제 경찰의 지배·탄압정책 관련 서술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중국 동북지방)에서 독립운동

단체나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해지고, 이들이 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인 '제7호'를 보강하는 한편, 추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이 제정·공포되자(1925.4.22), 같은 해 5월 8일부터 곧바로 이 법령을 식민지 '조선' 등에서 적용하여 임시정부 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²⁷⁾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에 따르면 치안유지법의 적용에서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조선에서 더 엄격히 적용되었으며, 특히 독립운동에 '國體變革' 조항을 적용하는 법원의 判例가 1930·31년부터 나오고 있어 일본 본토보다 무려 13년이나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 그만큼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운동가들의 고초가 더 컸던 것이다.

Ⅲ. 일본학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1. 사전류 검토

1) 먼저 일본근현대사사전편찬위원회 편, 『日本近現代史辭典』(4×6 배판, 1권 1089쪽,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78)을 찾아보았다. 이 사전은 한 권, 4×6배판의 대형사이즈로 108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다. 이 사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항목은 없었다. 다만 '3·1 운동'과 '조선독립운동' 항목에서 극히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27) 鈴木敬夫, 『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196~197쪽.

28) 水野直樹, 『植民地獨立運動に對する治安維持法の適用』,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淺野豐美·松田利彦 編, 信山社, 2004, 451~452쪽.

집필자는 두 항목 모두 井口和起였다. 현재 그의 소속과 직위는 알 수 없다.

① 3·1운동

“(중략) 또 일부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이 운동 중에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했으나, 조선 국내에 전혀 기초를 갖지 못했다.”²⁹⁾

② 조선독립운동

“(중략) 한편 일부 부르조아민족주의자는 3·1운동 가운데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나, 국내에 전혀 기초를 갖지 못하고, 또 국내에서는 물산장려운동 등을 외쳤지만, (후략)”³⁰⁾

임시정부 주도세력을 ‘부르조아민족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전혀 기초를 갖지 못한 조직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가 많은 서술이다.

2) 한편 内藤湖南(나이토 코난)으로 대표되는 동양사학의 전통으로 유명한 교토(京都)대학 동양사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동양사사전』을 찾아보았다.

이 사전은 ‘조선민족독립운동’ 항목이 있었으나, 3·1독립운동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3·1운동에 대해 “19년에 일어난 3·1독립운동은 최대규모를 보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³¹⁾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항목은 있었지만(515쪽),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 다만 ‘이승만

29) 日本近現代史辭典編纂委員會 編, 『日本近現代史辭典』,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78, 255쪽.

30) 위의 책, 425쪽.

31)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編, 『新編 東洋史辭典』, 東京創元社, 1980, 578쪽.

항목에서 임시정부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문제가 많다. 이 사전은 이승만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9년 上海에 임시망명 정부를 수립한 때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同 정부는 곧 해체되었다 (879쪽).”

3)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사전을 찾아보았다.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編, 『新版 日本外交史辭典』(東京: 山川出版社, 1992)인데, 이 사전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 단독 항목은 없었다. 다만 ‘조선독립운동’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한다. 이 사전은 일반 책자 크기로 부록·색인(224쪽)을 제외한 본문 내용만 1,103쪽에 달하는 제법 두꺼운 단행본이다.

朝鮮獨立運動(森田芳夫 집필)

“[II] 3·1운동(전략) 4월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자는 대의원 30인을 선출하여 의정원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으로 하고, 아메리카에 있던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여 임시정부를 조직, ‘聯通制’라고 하는 조선 내로 행정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연락망을 만들어 조선 내로 문서를 보내 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이승만은 그 후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내분 때문에 上海滯在 6개월에 아메리카로 돌아갔다). (중략) 그 후 상해 임시정부 파견의 의열단원들이 조선 내로 잠입하여 일본 기관의 파괴나 일본관리의 암살을 기도하는 움직임이 續發했다.³²⁾

[III]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 (중략) 이동휘는 19년 9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입각하고, 21년 5월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을 조직했다. [IV] 전쟁하의 독립운동 (중략) 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국민정부와 함께 重慶으로 이전했다) 소속의 조선인 군대 ‘광복군’에는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32)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編, 『新版 日本外交史辭典』, 東京: 山川出版社, 1992, 605쪽.

광복군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大西洋憲章이 발표될 즈음인 41년 8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주석 김구)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의 승인, 외교 관계의 개시, 군수품의 원조, 평화회의 개최 시에 한국정부 대표의 참가, 국제평화기구 성립시에 한국의 가입을 구했다. 同年 11월에 임시정부의 歐美외교위원부가 워싱턴에 설치되고, 이승만이 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45년 2월 9일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한 宣戰聲明書を 발표했다. (중략) 광복군·조선의용군 모두 전선에서 일본군대 내의 조선인병을 투항시켜 그 병력을 늘렸다. 연합국군의 조선 본토 진공작전에서는 그 先驅部隊가 되기 위해 광복군에 의한 낙하산부대의 훈련이 행해졌다.³³⁾

이 사건의 '조선독립운동'을 집필한 森田芳夫(모리다 요시오)는 경성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자로 방대한 분량의 『朝鮮終戰の記録』 1권과 『朝鮮終戰の記録』(자료편) 3권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다.³⁴⁾ 한국통으로 알려진 그는 특히 일본으로 귀환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한국관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집필한 위의 내용은 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한 것은 1945년 2월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이었는데,³⁵⁾ 모리다는 이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 1945년 2월 9일 임시정부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³⁶⁾

다만 아쉬운 것은 모리다 요시오의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한 위의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33) 위의 책, 606~607쪽.

34) 森田芳夫 編,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 및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戰の記録(資料編)』 1~3卷, 巖南堂書店, 1979~1980.

35)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의 연표』, 독립기념관, 2009, 481~482쪽.

36) 이만열, 위의 책, 512쪽.

교양서는 물론, 한국사 관련 개설서나 전문 연구서에서 조차 위와 같은 임시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연구·전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일본에서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와나미(岩波)서점 발간 『日本史辭典』(보통 단행본 사이즈, 菊版 크기 정도, 1권 1,802쪽 분량, 1999)의 관련 항목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단독 항목은 없었다. 다만 ‘한국’ 항목에서 두 줄 분량의 한 문장으로만 매우 간단히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관련 내용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① 조선독립운동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는 조선인의 운동. 의병운동이나 保護國期에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을 지향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원류가 되었다. 1910년대에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활동이 있었고, 만주에서는 독립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년에는 대중적인 3·1운동이 일어났다. 20년대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운동, 사회주의운동, 노농운동이 높아지고 민족공동전선인 신간회운동 등이 일어났다. 3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赤色勞組·적색농민조합 운동이 고양되고, 만주에서는 독립군 운동을 계승하여 항일빨치산의 활동이 전개되었다.”³⁷⁾

이처럼 이 사전은 짧은 분량으로 한민족 독립운동의 흐름을 압축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의 성립이나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서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7) 永原慶二 監修, 『岩波日本史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768쪽.

② 한국

“조선반도 국가의 약칭. (중략) 국명은 대한제국이고, 약칭으로 韓國이 쓰여졌다. 1919년 4월에 독립운동가들이 上海에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국호를 受繼한 것이다.”³⁸⁾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한국’ 항목의 국호 관련 내용에서 한 줄 언급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5) 加藤友康 外 編, 『日本史 總合年表』, 東京 : 吉川弘文館, 2001.
일본사 연표를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사전류 단행본인데, 임시정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서술하였다.

“(세계) 1919. 4. 10. 조선의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561쪽)

이 책은 특이하게도 4월 10일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개원일을 임정 수립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 12월 8일 미국·영국의 대일 선전포고, 12월 9일 중국 국민정부의 일본·독일·이탈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사실을 수록했지만(609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2월 10일 對日 선전포고 사실은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1945년 2월 9일 임시정부가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한 사실도 수록하지 않았다.³⁹⁾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38) 위의 책, 267쪽.

39)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의 연표』, 512쪽.

- 6) 佐佐木毅 外 編, 『戰後史大事典(1945-2004)』(増補新版), 東京 : 三省堂, 2005.

이 사전 역시 임시정부 단독 항목은 없었다. 대신 '한국·조선' 항목이 있었는데, 姜德相 교수가 집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주나 중국 대륙에서는 독립군이 항일전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만주에서는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계속해서 조선인민혁명군(34년), 조국광복회(36년)를 만들고, 상해에서는 3·1독립운동 직후에 김구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성명, 44년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편성했다. 연합국이 카이로선언(43년)에서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조선을 독립국으로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조선인의 투쟁의 성과였다(149쪽).”

김구가 중국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경이었고, 당시 임시정부 각료로 활동한 것도 아니었으므로,⁴⁰⁾ “김구 등이 임정의 성립을 성명”했다고 한 위 서술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행본 검토

임시정부 관련 자료집은 거의 한국인 학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⁴¹⁾ 거의 유일하게 일본의 진보적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가 강덕상과 함께 편찬한 『現代史資料』(朝鮮編)가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40)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282~285·299~300쪽에 따르면 김구는 1919년 3월 29일 황해도 안악을 출발하여 사리원,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안동에 도착한 뒤 7일을 체류한 뒤 이릉양행 배를 타고 중국 上海로 망명했는데(배에서 4일), 12~13일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성립 시기인 4월 11일 전후에 상해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1)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運動)』 2·3, 東京 : 原書房, 1967;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7卷(獨立運動), 東京 : 韓國史料研究所, 1971 등.

관련 연구에 1970년대부터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⁴²⁾

한편,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마쓰다 토시히코(松田利彦)의 임시정부나 한국독립운동 관련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지낸 마루야마 쓰루키치의 독립운동 인식에 관한 논문과 저서가 바로 그것이다.⁴³⁾ 마쓰다는 2009년 한국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에서 개최한 임시정부 9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1920년대 초 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⁴⁴⁾ 이 논문을 이듬해에 한국에서 출판된 단행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에 수록하였다.⁴⁵⁾ 마쓰다의 이 논문은 임시정부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책에 실어서, 사실상 한국학계의 청탁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일본학계에서 일본인 학자가 자발적으로 발표한 임시정부 주제 관련 단독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재일한국인 학자 강덕상(姜德相) 교수의 관련 글은 몇 편 찾아볼 수 있었다.⁴⁶⁾ 또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편찬한 한국사 사전에는 임시정부 관련 사항과 인물이 수록, 서술되어 있었다.⁴⁷⁾ 따라서 일본학자와의

42) 姜德相·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28・29(朝鮮 3・4 - 獨立運動 1・2), 東京: みすず書房, 1970・1972 등이 있다.

43) 松田利彦, 「丸山鶴吉の朝鮮獨立運動認識 -文化政治期の植民地警察官僚」, 『朝鮮民族運動史研究』 8號, 東京: 不二出版, 1992.4; 松田利彦, 「朝鮮總督府警察官僚・丸山鶴吉の抗日運動認識」,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 東京: 校創書房, 2009(4부 제2장).

44) 마쓰다 토시히코, 「1920년대 초 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기념 동아시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4. 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주최.

45) 마쓰다 토시히코, 「1920년대 초 총독부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출판사, 2010.

46) 姜德相 『呂運亨評傳 2- 上海臨時政府』, 東京: 新幹社, 2003; 『海外における朝鮮獨立運動の發展』,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紀要』 51冊, 1970.3; 『海外における朝鮮獨立運動の發展』, 『朝鮮民族運動史研究』 2集, 東京: 不二出版, 1985.6; 『上海臨時政府と呂運亨』, 『季刊三千里』 40號, 1984년 겨울 등.

공동연구나 공동출판 작업 수행, 한국의 양서·논문의 번역, 나아가 한국학자들의 일본 학술지 논문투고와 게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하 발간 순으로 몇 종류 단행본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坪江汕二, 『改訂增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東京: 巖南堂書店, 1966; 高麗書林 1993년 복각.

이 책은 일본인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판한 한국독립운동 관련 단행본이 아닌가 한다. 1959년 1월 초판이 발간되었고, 1966년 5월 제2판(개정 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이 출판된 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바로 개정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미국 등지에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1966년 한일회담(국교 수립) 성립 직후에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약력에 따르면 저자의 본명은 坪井豊吉, 1900년 시즈오카현(靜岡縣) 天龍市에서 출생하여 專修大學을 중퇴하고 조선총독부 경찰에 투신, 경찰서장과 통역관, 일본 외무성 촉탁, 警視와 감찰과장을 지낸 뒤 일본으로 귀국하여 법무사무원·연구원 등을 지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나름의 '한국통'임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조선총독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인물과 정보, 자료를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활용 자료는 대부분 조선총독부나 일본 내무성·외무성

47) 韓國史事典編纂會·金容權 編, 『朝鮮韓國近現代史事典(1860-2001)』, 東京: 日本評論社, 2002의 제2장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와 민족의 항전(1910~1945)', 2.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에 관련 항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대한민국 임시헌장, 연통제, 구미위원부, 한성정부, 노령 임시정부(대한국민의회),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양기탁, 노백린, 신구식 등의 사항과 인물이 서술되었다(201~207쪽).

등 관련 내부자료를 활용했을 것으로 된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당한 비중으로(제3장, 79~109쪽, 모두 31쪽 전체의 4.6% 분량) 서술되고 있다.

이 책의 임시정부 관련 주요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제2장 上海임시정부를 둘러싼 민족주의운동
제1절 임시정부의 성립과 파벌항쟁
제2절 임시정부 초기에 있어서의 파쟁 -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
1. 파쟁의 격화와 이승만의 미국으로의 탈출
2. 국민대표회와 韓國勞兵會의 압투 - 임시정부의 궁핍
제3절 在米 조선인의 임시정부 지지운동
1. 안창호와 이승만의 대립항쟁
2. 歐美위원부를 둘러싼 파쟁 - 이승만의 몰락
제4절 昭和시대의 파쟁 - 한국독립당의 결성
1. 안창호의 체포와 김구 일파의 대두
2. 파쟁의 격화와 支那事變의 발전
제5절 중국 본토 각지에서의 민족독립운동
1. 上海의 임시정부를 둘러싼 운동
2. 南京 - 민족혁명당의 결성과 좌파의 동정
3. 北平和 天津에서의 운동
4. 廣東방면에서의 민족독립운동

48) 이 책의 전체 목차와 서술 분량은 다음과 같다. 序章 明治시대의 민족독립운동(35~46쪽), 제1장 조선에서의 민족주의운동(47~78쪽), 제2장 上海임시정부를 둘러싼 민족주의운동(79~109쪽), 제3장 국외에서의 민족적 공산·무정부주의운동(110~129쪽), 제4장 조선 내에서의 사회주의운동(130~191쪽), 제5장 일본에서의 終戰 전의 민족·사회주의운동(192~399쪽), 제6장 終戰 후의 조선민족독립운동(400~545쪽), 부록(547~608쪽), 자료(609~709쪽).

제6절 만주에서의 민족독립운동

1. 日韓合併부터 大正8년 전후까지 - 露領 자유시사건
2. 關東大震災로부터 樺甸縣회의로 - 全滿統一會議로
3. 統義府의 항쟁과 正義府의 上海假政府 지지
4. 扶族統一會議와 新民府의 조직
5. 3府의 통일과 國民府의 활동 - 김좌진의 암살
6. 만주사변 후의 활동

제7절 중국측의 원조와 임시정부의 통일강화 - 對日宣戰

1. 좌우의 합작과 광복군총사령부의 설치
2. 대한민국임시정부 최후의 면모

제8절 해방 귀국 후의 임시정부 일파의 동정

* 在支朝鮮人團體 組織系統表

이 책의 서술 내용과 서술 분량을 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패전 이후의 한국현대사 및 일본현대사와의 관련이나(제6장 종전 후의 조선민족독립운동, 400~545쪽), 일본에서의 독립운동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운동 분야(제5장 일본에서의 終戰 전의 민족·사회주의운동, 192~399쪽)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임시정부 관련 서술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본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임시정부', '上海임시정부'라고 칭하고 있으며, 심지어 '假政府', '上海假政府'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 과거 조선총독부 경찰관의 시각으로 임시정부를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 내용도 대부분 내부 파쟁과 대립, 파벌투쟁의 역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거의 최초로 나온 이 책의 서술 내용이 추후 일본 학계나 국민 일반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 佐佐木春隆, 『朝鮮戰爭前史としての韓國獨立運動の研究』, 東京 : 國書刊行會, 1985, 206~341쪽.

저자 사사키 하루타카(佐佐木春隆)는 1920년 구마모토(熊本縣)생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54期, 1940년) 중일전쟁에 참가했다. 이후 일본 자위대에 입대하여 1972년 퇴역하였다. 그 후 일본 방위대학교 陸上防衛學教室 교수로 근무하다가 1985년 3월 퇴직하였다. 京都大學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⁴⁹⁾ 일본 육군 출신으로서 『朝鮮戰爭』 1~10권(3권 제외) 등 방대한 戰史 서적을 발간한 전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타계하였다.⁵⁰⁾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 책이 조선전쟁이 발발한 민족 내부의 요인을 고찰하는 자료로서, 혹은 한국을 이해하는 一助로서, 나아가 우리나라(일본 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데 더하여, 무엇인가 참고가 될 수 있다면 望外の 행복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아카데미한(학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주로 戰史연구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852쪽의 본문 분량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무려 136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7장 ‘東滿의 빨치산보다는 작은 비중이지만, 약 16%에 달하는 비중인데, 한국에서 출판된 독립운동사

49) 위 책의 저자 약력에 따름. 한국인 가운데 일본 육사 54기 졸업생(1940년 졸업)으로 김정열·정일권 등이 있다.

50) 저자 사후인 2012년 10월 『韓國獨立運動の研究(新裝版)』가 초판을 낸 출판사인 國書刊行會에서 간행되었으나,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보완코자 한다.

개설서 가운데서도 이처럼 많은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⁵¹⁾

이 책의 임시정부 서술 내용(목차)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제3장 대한민국임시정부 (206~341쪽)

1. 列國의 지원 태도

- 1) 중국 2) 아메리카

2. 백범·김구

3. 上海임시정부

- 1) 3개의 정부 2) 施策과 노력 3) 派의 구성 4) 내분

4. 분열·유산·재건

- 1) 분열 2) 무정부상태 3) 재건

5. 上海로부터 重慶으로

- 1) 김구의 테러 2) 落鄉과 분규와 유랑 3) 重慶遷都

6. 重慶임시정부

- 1) 통일을 이루지 못함 2) 千載의 遺恨 3) 戰機를 잃다

일본 보수(우파)학자(장교, 관료)의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임시정부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위 坪江汕二의 책처럼 파벌투쟁을 강조하거나, 임시정부나 김구,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테러'로 격하하는 등 상당부분 왜곡된 인식과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51) 이 책의 목차와 서술 분량(쪽수)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1장 망국의 통곡(2~127쪽), 제2장 국내에서의 민족운동(128~205쪽), 제3장 대한민국임시정부(206~341쪽), 제4장 아메리카에서의 독립운동(342~452쪽), 제5장 東滿의 독립군(453~563쪽), 제6장 공산주의운동(564~655쪽), 제7장 東滿의 빨치산(656~847쪽), 맺음말(848~852쪽).

실정이다. 다만 이 책처럼 임시정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單行本을 아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다른 저서나 논문, 교양서 등에 어떻게 인용되고 활용 · 관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후 일본학계나 일반 일본 국민들, 학생들에게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제대로 연구 · 교육하게 하고, 그 진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朝鮮史研究會에서 간행한 『新版 朝鮮の歴史』(東京 : 三省堂, 1995)는 임시정부의 성립과 1920년대 초 · 중반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7장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

제2절 '문화정치'와 민족운동의 전개 '재외조선인의 증대'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에서는 조선이나 일본처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나 탄압을 받는 것이 적었다. 이 때문에 3·1운동이 고양된 1919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운동의 지속을 위해 국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해에서 통합되어 4월에 제1회 임시의정원이 열리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족했다. **임시정부는 9월에 공화주의와 삼권분립을 정한 임시헌법을 채택하고, 국내외의 연락조직도 만들고,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독립전쟁을 주장하는 노선과 외교에 의해 독립을 지향하는 노선이 당초부터 대립하고 있어, 수뇌부는 외교독립 노선을 취하고 제1차 대전 후의 국제정세 가운데서 열강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파탄했다. 그리고 1923년에 사태 수습을 위해 소집된 국민대표대회에서는 임시정부 해체를 부르짖는 창조파와 존속을 호소하는 개조파와의 균열이 결정적으로 되었다. 더욱이 **1925년에는 아메리카에서의 로비활동에 시종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이리하여 1920년대 중반경까지 임시정부의 힘은 급속히 약해졌다.**”⁵²⁾

52) 朝鮮史研究會 編, 『新版 朝鮮の歴史』, 東京 : 三省堂, 1995, 287~288쪽.

또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책 제7장 제3절 「전시체제하의 조선」 ‘국외에서의 민족해방운동’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중략) 또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 아래 간신히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日中戰爭이 시작되자 중국국민당과 함께 重慶으로 옮겨 저항을 계속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다음 해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군사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 내외에서 민족해방 운동이 끈질기게 계속되어 일본에 큰 위협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도 격해져 조선 내에서는 본격적인 운동이 조직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빠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1945년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에 따라 조선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다.(강조 및 밑줄은 필자)⁵³⁾

주목되는 사실은 이 책의 年表에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⁴⁾ 또 위의 밑줄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으로 이루어졌다고 서술하여 결국 ‘타율적 해방’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책이 일본학계에서 간행한 거의 유일한 전문성 있는 한국사 개설서이고, 아직까지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의 서술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개정판이 준비되고 있다면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3) 朝鮮史研究會 編, 위의 책, 298-299쪽.

54) 「朝鮮史 年表」, 위의 책, 9쪽.

4) 일본인 학자가 발간한 단행본 가운데 비교적 상세히 임시정부를 다룬 학술 저서는 나가다 아키히미(長田彰文, 上智大 史學科 教授)의 『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朝鮮獨立運動とアメリカ』(東京: 平凡社, 2005)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94년 5월 저자의 一橋大學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증보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長田彰文이 그동안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을 수정하여 수록한 것인데, 3·1운동 전후 시기 임시정부와 관련 要人の 동향, 미국 워싱턴회의시 임시정부 외교활동 등의 동향과 일본·미국 정부의 대응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秀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⁵⁵⁾ 30여 쪽에 이르는 분량이 서술되고 있다.

5) 임시정부와 상해 일본총영사관 등의 대응과 탄압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언급한 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 1953년생, 小樽商大 교수)의 일련의 연구를 집대성한 『外務省警察史 - 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東京: 校倉書房, 200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구가 이끌던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의 虹口公園 특공작전 이후 상해총영사관은 임시정부 등 상해지역 한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상해경찰부 제2과'를 신설하고, 전무원(專務員) 부영사(副領事)·경부(警部)·경부보(警部補)·순사부장 각 1명, 순사 3명, 선박계(船舶系) 순사 2명 등 총 10명을 전담케 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⁵⁶⁾

55) 『朝鮮獨立運動と國際關係 - 1918~1922年』, 『季刊國際政治』122號(1999.9) 논문은 이 책 내용의 요약으로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 임시정부를 다루고 있는 6장 『3·1運動期における朝鮮人の外交活動の展開』는 『一橋論叢』115卷 2號, 一橋大學一橋學會(1996.11) 발표논문, 9장 『3·1運動と日本』은 『朝鮮3·1獨立運動と日本政界 - 運動への日本の對應と朝鮮統治の改革をめぐる政治力學』, 『上智史學』44號(1999.11) 게재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또 13장 『ワシントン會議と朝鮮問題 - 朝鮮獨立運動と日米』은 『姜徳相先生古稀 - 退職記念, 日朝關係史論集』(東京: 新幹社, 2003) 게재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2장에서도 간단히 서술한 마쓰다 도시히코가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東京:校創書房, 2009)을 간행하여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경찰 운영 및 한국인 등 민중 탄압의 실상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연구자의 시각과 다른 주체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6) 일본 조선사연구회 편(박대재 옮김), 『한국사 연구 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6.

이 책은 일본의 朝鮮史研究會가 발간한 『朝鮮史研究入門』(名古屋:名古屋大學出版會, 2011)을 번역,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을 통해서 파악한 일본학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단독 연구 성과는 단 한 편의 논문이나 단 한 권의 저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일본 연구자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체를 불법시하고 '不逞團體'로 간주했는데, 그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 일부 지속된 일부 일본 역사학계의 좌파적 성향과 위에서 검토한 坪江汕이나 佐佐木春隆의 비학술적 저서가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단행본은 아니지만 샷사 미츠아키(佐佐充昭)의 임시정부 및

56) 荻野富士夫, 『上海警察部第2課の創設』, 『外務省警察史 - 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692~707쪽 참조.

관련 논문 몇 편과,⁵⁷⁾ 다른 학자의 관련 논문과 저서 몇 편을 찾아볼 수 있었다.⁵⁸⁾ 추후 더 광범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특히 샤타 미츠아키(立命館大 교수)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근래 徐一과 박은식·신규식 등 대중교 관련 인물 및 임시정부, 북로군정서 등 만주(중국 연변) 독립운동 세력과의 관계와 활동을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며 거의 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본학자들과 구별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유학하여 석사·박사(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통으로 파악된다.⁵⁹⁾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2005년도 논문 「亡命디아스포라에 의한 朝鮮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창출-大倭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朝鮮史研究會論文集』 43집)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의 주요 지지 및 지탱의 배후 세력으로 활동한 신규식·박찬익·조성환 등의 활동과 대중교, 임시정부와의

57) 佐佐充昭, 「亡命ディアスポラによる朝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出-大倭教が大韓民國臨時政府運動に及ぼした影響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3集, 東京: 綠蔭書房, 2005.10; 佐佐充昭, 「間島 지역에서 대중교의 초기활동과 白峯集團 - 倍達民族史觀의 宣揚」, 『간도와 한인 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佐佐充昭, 「1910年代以降における朴殷植の民族獨立運動と『國魂論』の提唱 - 大倭教との關係を中心に」, 『朝鮮學報』 228集, 奈良: 天理大學, 2013.7; 佐佐充昭, 「青山里戰鬪において大倭教が果たした役割-ロシア革命派からの武器入手を中心に」, 『朝鮮學報』 242集, 天理大學, 2017.1; 佐佐充昭, 「北路軍政署の創設と大倭教 - 總裁・徐一の活動を中心に」, 『立命館國際地域研究』 45號, 立命館大學 國際地域研究所, 2017.3 등을 찾아볼 수 있다.

58) 內田知行, 「重慶國民政府と抗日期の朝鮮人獨立運動」, 『近きに在りて』 36號, 1999.12; 岡本眞希子, 「總督政治と政黨政治 - 2大政黨期の總督人事と總督府官制・豫算」,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號, 東京: 綠蔭書房, 2000; 「朝鮮總督府警察官僚・丸山鶴吉の抗日運動認識」,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 1905~1945年』, 校創書房, 2009; 加納敦子, 「韓國光復軍のインド・ヒルマ戰區工作隊派遣」, 『現代韓國朝鮮研究』 15, 2015 참조.

59) 「惠崗 崔漢綺의 氣哲學: 西洋科學과의 接觸을 통해 變容된 氣哲學」,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대중교·단군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종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8.

관계를 주목하고 대중교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 등 그 영향을 조명한 것이다. 또 「청산리전투에서 대중교가 수행한 역할- 러시아혁명파로부터의 무기 입수(入手)를 중심으로」(『朝鮮學報』 242집, 2017년 1월)에서는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 등의 무기구입 과정과 대중교의 역할을 검토하면서 임시정부(이동휘 등)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러시아 혁명세력과의 연대에 미친 영향 등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임시정부 관련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결국 삿사 미츠아키의 연구성과 외에는 아직 두드러진 임시정부 연구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간보고서 관련 내용 검토

1982년에 발생한 한·일 사이의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 4월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저술한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扶桑社[후소샤] 판)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통과되면서 정점을 이루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격렬한 ‘반일여론’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에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한일관계의 역사를 공동연구함으로써 현안을 처리할 것을 제시했다. 결국 양국 정부의 조정 끝에 한일 양국 정상은 2001년 10월 회담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⁶⁰⁾

이에 따라 2002년 3월, 한일 양국은 위원장 및 위원 총 22명으로 구성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여의 공동연구와 토론 및 조사를 거쳐 2005년 6월 최종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끝냈다.

60) 「한·일 역사공동연구」(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0년 3월 30일).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제3분과 근·현대사편)는 임시정부 단독 주제의 연구보고는 없지만, 한국의 서중석 교수(성균관대)와⁶¹⁾ 일본인 학자의 관련 주제 보고 내용에 간단히 언급되고 있어 일본인 학자의 언급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2기 위원회 시기(2007.6~2009.12)에 독립운동사 관련 주제는 한·일 간에 발표·논의되지 않았다.

“조선인의 대응 1. 저항운동의 시기적 특징

제2기의 저항운동은……(중략) 그리고 국외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및 만주로부터의 국내 진공작전의 전개에 보이는 무장투쟁의 활발화 등, 여러 가지 운동의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중략) **국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파 대립으로 인해 분열하고** 만주의 운동도 일본의 간도출병 및 張作霖 정권의 단속에 의해 점점 곤란해졌다. (중략) 또 국외의 항일무장투쟁도 일본의 만주 진출에 따라 탄압을 입고 점차 해소되어, 근거지도 만주에서 러시아령으로 후퇴해갔다. 그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동도 잇달아 분열을 더해, 중국 국민당의 종속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 시기의 운동도 쇠퇴하여, 그 결과 독립은 밖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⁶²⁾

이 보고 내용의 필자는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일본측 연락책임을 맡았던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東京都立大 법학부 교수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의 관변 어용사학자의 글을 보는 듯하다. 한국이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무려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운동의 역량을 부정하며, ‘당파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사실에

61) 서중석, 『일제의 조선 강점과 한국의 독립운동』,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3분과 근·현대편), 2005, 참조.

62) 森山茂徳, 『植民地統治と朝鮮人の對應』,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3분과 근·현대편), 2005, 14쪽(한글판 13~14쪽).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가 좌우통합을 이루고 '건국강령'을 제정하며,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카이로선언 등에도 영향을 끼쳤던 사실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 해석과 인식의 격차가 한일 양국 학계의 현실적 상황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⁶³⁾

IV.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대한민국임시정부

1. 2006년도 검정(2008년도 사용)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서술 내용

일본 고교 교육과정에서 세계사는 종래 필수과목. 세계사 교과서는 A와 B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는데, 이 가운데 A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B는 통사(通史) 형태의 교과서로 파악된다.⁶⁴⁾ 일본사 교과서 역시 A와 B로 구분되는데, 세계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는 근현대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이며, B는 전 시대를 망라한 통사 중심의 개설서로 분류할 수 있다.⁶⁵⁾

63)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연구 방법 등을 둘러싼 한일 사이의 견해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측은 한일 사이의 쟁점 사항을 주제로 삼고 연구 성과를 역사교과서 편찬에 반영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학문의 시각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3분과 근·현대편, 2005)에는 李萬烈, 「근현대 한일관계 연구사 - 일본인의 한국사연구를 중심으로」와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日本における近現代日韓關係史研究」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람.

64) 이찬희·임상선·신주백, 『2007년도용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분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75쪽.

65) 위의 책, 81쪽.

2006년도에 문부성 당국의 검정을 통과하여 2007년에 채택, 2008년도부터 사용된 세계사 교과서(A 6종, B 3종)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없었다. 조사된 세계사 교과서 모두 3·1운동에 대해서는 서술하였지만(용어는 조선의 “3·1 독립운동” 또는 “3·1운동”), 3·1운동의 결과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결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上海에 수립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는 한 권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사 교과서 역시 비슷했다(A 3종, B 1종). 조사한 일본사 교과서 모두 3·1운동(“3·1독립운동” 또는 “3·1운동”)에 대해서는 서술했지만,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으로 파악되었다. 실교(實敎)출판사에서 발행한 『高校 日本史A』(新訂版)였다.

이하에서 그 내용을 예시하기로 한다(『高校 日本史A』(新訂版), 實敎出版, 2008년도용, 115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3·1독립운동 후, 각지의 독립운동가가 上海에서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취임하고 임시헌법과 내각 名簿를 公表하였다. 초기의 임시정부는 각국에 조선민족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또한 조선민족에 민족해방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1919년, 당시 50만인의 조선인이 살고 있던 만주나 연해주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이 격화되었고, 1930년대에는 무력으로 일본군과 싸웠다.”⁶⁶⁾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만주(중국 동북지방)와 러시아 연해주 항일무장투쟁을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66) 위의 책, 199쪽.

1920년대 초 독립군의 무장항쟁 등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 2013년도 검정(2015년도 사용)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서술 내용

2013년도에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A·B(A 3종, B 6종)를 검토해 보았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임시정부를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실교출판사의 『일본사 B』교과서였다. 이하 내용을 摘記한다.

① 『高校 日本史B』, 實教出版, 2015년도용, 191쪽.

“(3·1독립운동)

조선총독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운동을 엄중하게 진압하여 7,5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다. 그 후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한글신문의 발행을 인정하는 등의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굵은 글자는 원문 그대로임).”

그나마 ‘3·1독립운동’이나 安重根의 伊藤博文 처단, 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무장투쟁 등에 비해 매우 소략한 분량의 간단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또 2013년도 문부성 검정 3종의 『세계사 B』 교과서를 검토했더니, 유일하게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② 『高校 世界史B』, 東京書籍, 214쪽.

<조선의 독립운동과 식민지정책의 전환>

(중략) 大戦 후에 조선에서도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소리가 고조되었고,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시위가 각지에서 발생했다(3·1독립운동).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언론 등 일정한 자유를 인정하고 친일파를 육성하는 것으로 동화를 추구하는 통치정책으로 바꾸었다. 또한 해외로 망명한 민족운동가는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굵은 글자는 원문 그대로임)."

3. 2016년 검정합격(2018년도 사용) 일본 고교 세계사 교과서 관련 내용 검토

2016년 일본 문부성 검정 합격 세계사 A 8종, 세계사 B 3종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세계사 A·B 모두 '조선의 3·1독립운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종래 3·1운동 또는 3·1독립운동으로 표기되던 용어가 모두 '3·1독립운동'으로 통일되어 표기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안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세계사 A』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었는데, 다행히 3종의 『세계사 B』 교과서는 모두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이다. 임시정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세계사 B』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高校 世界史B』, 實敎出版, 2018년도용, 350쪽.

“<3·1독립운동과 조선사회>

(중략) 일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중도 다수 참가하여 운동은 조선 전국 및 중국 동북부·연해주 지역까지 확산되었다(3·1독립운동). (중략) 이 무렵부터 조선의 언론·계몽·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도 활발해진 것 외에 上海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일본은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인했지만, 사회주의운동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엄격하게 단속하였다(굵은 글자는 原文).”

2) 『高校 世界史B』, 山川出版社, 2018년도용, 347~348쪽.

“<일본의 움직임과 동아시아의 민족운동>

(중략)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외치는 데모가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곧 조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3·1독립운동). 총독부는 군대도 동원하여 운동을 진압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무단정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문화정치’라고 불리는 동화정책으로 전환했다. 1919년 4월에는 조선의 독립운동 諸團體를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上海에서 결성되었다(굵은 글자는 原文).”

3) 『高校 世界史B』, 東京書籍, 2018년도용, 369쪽.

“<조선의 3·1독립운동>

(중략) 월슨의 14개조 평화원칙이 발표되고 세계에서 민족자결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1919년 3월 1일 지식인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하자 서울(일본 통치하의 호칭은 京城)의 민중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어났다. 이 3·1독립운동은 곧 조선 全土로 확산되었지만, ⑮ 일본 정부는 이를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철저히 탄압하였다. 그 후 일본은 문화정치라는 이름의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저항하는 반일독립운동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굵은 글자는 原文).”

(각주) ⑮ 上海에서는 3·1독립운동의 계속을 목표로 하여 이승만 등 망명

조선인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본문에 서술하지 않고 각주에 단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추후 세계사와 일본사 교과서 모두에 임시정부 관련 서술을 포함시키고, 특히 일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분량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4. 최근 일본정부의 교과서 관련 동향 - 우려의 심화

2018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안)」은 지리·역사, 공민 교과를 재편성하여 '역사총합(歴史 総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이들 과목은 물론 일본사 탐구, 지리 탐구, 정치경제 등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였다.⁶⁷⁾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이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교과서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날 공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안)은 이 해 3월 30일 확정되었다. 물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인 신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총합」 과목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의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歐美)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⁶⁸⁾ 라고 명기한 것은

67)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안)에 대한 재단 입장」 (2018.2.14),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참조(2020년 3월 1일 검색).

68) 위와 같음.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근현대사 기술에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1982년 11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⁶⁹⁾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소위 애국심 교육 강화라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기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국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화해를 위한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개편에 따르면 2020년부터 '역사총합(歷史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들 교과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 문부성 당국은 2017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반영하여 개발된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2020년 검정)의 수정·보완본 검정결과를 2024년 3월 22일(금요일)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당국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18종(지리4, 공민6, 역사8)이 검정통과되었다.⁷⁰⁾ 그런데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교과서 대비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기술이 최근 일본의 전반적 우경화 추세에 부응하여 더욱 악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⁷¹⁾ 또 지난 2024년

69) 위와 같음.

70)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보도 참고자료』 (2024. 3. 22);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참조(2024년 4월 11일 검색).

71)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보도 참고자료』 (2024.

4월 19일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 레이와서적(令和書籍) 발간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이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교과서는 왜곡된 우익 사관에 기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로,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⁷²⁾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서 2026년에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⁷³⁾ 현재 금년 검정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임시정부 관련 기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V. 맺음말 :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구 振作, 교과서 서술 반영 방안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가정부[假政府]' 등)로 간주하며 시종일관 탄압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필자가 이상에서 조사한 자료에 한정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와 일부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서술, 평가는 매우 미흡하며, 부정확하고, 부정적이며,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시정부에 대한 근래의 연구성과는 삿사 미츠아키(佐佐充昭)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3. 22), 2~3쪽 참조.

72) 이상훈,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동아일보』 2024. 4. 19(온라인 기사) 참조.

73)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보도 참고자료」 (2024. 3. 22), 2쪽.

판단된다.

그나마 일본 역사(일본사,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는 싯교출판사(實敎出版社)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해 소략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을까? 여기에는 많은 내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학계의 보편타당하며 국제적 설득력이 있는, 국제학계에서 수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의 부족, 일본학계의 임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학계의 연구 성과의 희박성, 일본 문부성 『학습지도要領』의 문제 등 교육계나 사회의 정치적 원인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학계의 일본학계·교육계와의 교류 미흡과 연구 성과의 국제화, 대중화 미흡 등이 아닌가 판단된다.⁷⁴⁾ 물론 근래의 경색된 한일관계와 교류의 쇠퇴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어쩌면 일본학자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의 매력이나 장점이 다른 주제보다 덜하거나, 연구 성과 활용도나 인용도(引用度)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주제 연구보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한국사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일본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보편적 설득력을 갖는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일본사 교과서보다

74)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09년 임정 수립 90주년, 1999년 80주년 등을 계기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관련 자료집도 출판되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는 전체 51권 분량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05~2011)을 간행하였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60권 분량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2007~2009)를 간행하였다.

오히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임시정부가 서술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이 가능할까?

1. 국제학계 · 교육계(특히 일본학계)와 교류 강화 · 활성화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출판 등 모색

공동연구와 교재 편찬의 사례로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휴머니스트, 2012) 편찬의 사례를 들 수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후원). 이 책은 전문가와 현장 중·고교의 교사 등이 상당 기간 머리를 맞대고 한중일 3국 공동의 근현대사를 연구 · 편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마주보는 한일사』 1~3, 사계절, 2014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마주보는 한일사』 3권의 경우 '한일 근현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수차례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국내외 학계의 임시정부 연구 강화와 성과의 국제화, 대중화 및 홍보 강화

먼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 학술서와 교양서 발간 등을 수행하여 국내외 학계에 알리고 교류하며,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DB 구축과 인터넷 ·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보급,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자들의 국제학술지, 일본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적 · 객관적 연구 자세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

과도한 '임정 법통론'이나 정통론적 관점은 외국학자나 외국인들의 거부감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 일본 학술서나 개설서, 교양서, 역사교과서 등 반영 노력 강화
이를 위해 수준 있는 국내학자 연구 성과나 개설서의 일본어나 영어, 주요 외국어 번역 발간을 도모하고, 공동 연구모임이나 교수·교사·시민 교류회,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지식 전달 강구를 모색해야 한다. 또 과거 두 차례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살려 향후 '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교육부·외교부), 또는 관련 기관(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시민단체·기념사업회 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의 연구와 교육 강화

한국학계, 교육계의 한국근현대사 또는 동아시아사, 한국사, 세계사 과목 등을 통해 임시정부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단 교육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입시 및 수업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나 기념사업회 등의 시민강좌, 대중강좌, 교재, 교양서 발간 등을 통한 실상 전파와 인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광복군)의 실상과 업적,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자유로우며 진솔한 연구, 일상적 담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구현, 발달된 IT나 AI 기술 등을 활용한 다각적 콘텐츠화 도모

유명한 여성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따르면 "혁명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주위에서 쉽게 늘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상적 ‘이야기하기’의 실현도 중요한 것이다.

6. 학계나 연구자 개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진솔 · 개방적 인식과 평가, 이데올로기화 배격 필요성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파 · 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화를 배제하고 진정한 학문적 탐구와 그 성과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개방적 시각과 평가가 가능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연변, 또 중국 · 일본학계, 구미(歐美)학계 등의 지역에 따른 시각이나 입장의 차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이데올로기적(이념에 따른 편향적) 평가나 그러한 시각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휴 외(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 국사편찬위원회(200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1』,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3』,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4』, 국사편찬위원회.
- 김중수 편(2001), 『상해한인사회사』, 한울 아카데미.
- 도진순(1997), 『백범일지』, 돌베개.
- 박대재 편(2016), 『한국사 연구 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병선·안종웅(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관한 프랑스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45.
- 서종진(2019),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의 식민지 분할통치』, 동북아역사재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이만열(2009), 『한국독립운동사 연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찬희 외(2007), 『2007년도용 일본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세윤(2019),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1919~1932)』,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88.
- 최유리(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일제의 정책』,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 한지현(2004),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30.
- 鈴木敬夫(1989), 『(法을 통한)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동북아역사재단, 『2013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 번역본(일본사B)』(未刊)
- _____, 『2013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 번역본(일본사A·세계사B)』(未刊)
- _____, 『2016년 검정합격 일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 번역 자료집』(未刊)
- _____,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안)에 대한 재단 입장』(2018.2.14.)
- _____, 『2024년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보도참고자료』(2024.3.22)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참조(검색일 2024년 4월 11일)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국외 항일운동 일본외무성기록',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上海假政府1~6』 및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美1~8』
- 坪江汕二(1966), 『改訂増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巖南堂書店 ; 高麗書林 1993년 복각.
- 日本近現代史辭典編纂委員會 編(1978), 『日本近現代史辭典』, 東洋經濟新報社.
-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編(1980), 『新編 東洋史辭典』, 東京創元社.
- 佐佐木春隆(1985), 『朝鮮戰爭前史としての韓國獨立運動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編(1992), 『新版 日本外交史辭典』, 山川出版社.
- 朝鮮史研究會 編(1995), 『新版 朝鮮の歴史』, 三省堂.
- 永原慶二 監修(1999), 『岩波日本史辭典』, 岩波書店.

- 加藤友康 外 編(2001), 『日本史總合年表』, 吉川弘文館.
- 韓國史事典編纂會・金容權 編(2002), 『朝鮮韓國近現代史事典(1860-2001)』, 日本評論社.
- 佐佐木毅 外 編(2005), 『戰後史大事典(1945-2004)』(增補新版), 東京: 三省堂.
- 荻野富士夫(2005), 『外務省警察史 - 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 長田彰文(2005), 『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 - 朝鮮獨立運動とアメリカ』, 平凡社.
- 松田利彦(2009),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 校創書房.
- 水野直樹(2004), 「植民地獨立運動に對する治安維持法の適用」,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淺野豐美・松田利彦 編, 信山社.
- 森山茂徳(2005), 「植民地統治と朝鮮人の對應」,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3분과 근・현대편).
- 佐佐充昭(2005), 「亡命ディアスポラによる朝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出-大倭教が大韓民國臨時政府 運動に及ぼした影響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3集, 綠蔭書房.
- 佐佐充昭(2017), 「青山里戰鬪において大倭教が果たした役割-ロシア革命派からの武器入手を中心に」, 『朝鮮學報』 242集, 奈良: 天理大學.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Japanese Academia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Se-Yun Chang^{*}

Abstract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in Korea and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did not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ismissed it as an illegal organization(“shadow government”) and continuously suppressed its activities. As a result, the perception,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ome Japanese academic research and history textbooks remained very weak and scarce. In addition, many inaccurate and negative accounts have been found. Apart from the works of Sassa Mitsuaki(佐佐充昭), there are few contemporary works by Japanese scholars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mong Japanese history textbooks (on Japa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those published by Shikkyo Publishing House stand out for giving a brief but relatively accurate accou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mong Japanese scholars, promote comprehensive research and develop better ways to portra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Japanese textbook narrativ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seek systematic solutions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and revitalize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 Chief Researcher, Sungkyunkwan University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E-mail: seiyoon06@naver.com)

scholars and educators (especially Japanese scholars), including the promotion of more active joint research and joint public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research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by Korean and foreign scholars and to internationalize, popularize and promote the results of such work. Thir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present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Japanese academic books, introductory books, humanities books and history textbooks. Fourth, Korean academic, education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promote more active and rigorous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subject. Fifth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free and honest research on the realities, achievements,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Korean Liberation Army. It will be important to promote discourse and storytelling and to create diverse content that can be consumed in everyday life. Finally, we must be careful not to ideologize under the influence of a particular political ideology or a teleological view of history in the way we perceive, evaluate and describ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ject ideologically biased perspectiv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Yanbian, China, Chinese and Japanese academia, Western academia and so on.

Keyword: Japanese Academia,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historical recognitions,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in Korea